

■ 붙임자료2. 공작정치 주요 피해 사례 20개

주요 사례 요약

1. 법조계 및 민변 관련

순번	메모일 (2014년)	내용	배경, 이후 진행 및 평가
1	9. 11.	“장경욱 변 철저 고발 건 조사 - 안타깝다 - 변(호사 자격) 정지 - 법무부 징계”	업무일지 중 9. 6.자에는 간첩 조작 사건의 당사자인 홍강철 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그 직후에 위 사건을 맡고 있던 장경욱 변호사에 대해 징계를 요청 하는 내용이 나옴. 그리고 실제로 2014. 11. 3. 법무부가 대한변협에 장경욱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였음. 특히 법무부가 문제 삼은 사건은 2012년도에 이미 마무리된 사건인데 그걸 이 때서야 문제 삼기 시작했던 것 임. 업무일지 내용 중 ‘안타깝다’라는 표현은 형사사건으로 진행하지 못한 점 을 두고 한 것으로 보임.
	10. 26.	“민변 변호사 징계 추진 현황 보고 요”	이 날짜 직후인 2014. 11. 5. 서울지방검찰청이 실제로 민변 변호사 7명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를 신청하였음.  ‘추진’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점에서 민변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단순히 법무 부-검찰 차원이 아니라 청와대 수준에서 기획되었다는 의심이 듬
2	9. 6.	“법원 지나치게 강대, 공룡화” “견제수단 생길때마다 다 찾아서 - 검찰입장” “길을 들이도록(상고법원, or) 갑일시에만” “입증의 정도. 문제 - 시대. 조건 변화” “법원 지도층과의 현하(現下) communication 강화”	청와대가 상고법원을 이용하여 법원을 길들이고 법원 지도층과 교류를 강화 하겠다는 내용으로서 이는 헌법상의 3권분립 제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태임.  홍강철 사건을 장경욱 변호사가 변론했는데, 그 이후인 9. 11. 장경욱 변호

		“홍강철의 변심이 key - 방지 위한 접촉 법원 거부감과 제재” “법원도 국가안보에 책임있다는 멘트 필요 -> 국가적 행사 때”	사에 대한 징계 언급이 나오고 그 뒤인 11. 5. 실제 징계개시신청까지 이루어졌음.
3	10. 11.	<장> “대한변협회장 선거 - 건전인사 선출, 단일화, 애국단체의 관여 요구됨”	대한변협회장 선거에서 실제 단일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청와대가 대한변협 선거에까지 개입하려고 한 것은 심각한 문제임.
	10. 14.	“내년 1월 대한변협회장 선거 -> 합리적 인사, 단일화”	

## 2. 통합진보당 관련

순번	메모일 (2014년)	내용	배경, 이후 진행 및 평가
4	10. 4.	長- 통진당 해산 판결. 연내선고	해당 메모가 작성된 시점은 해산 결정이 나기 두 달 전으로 증거 조사 등이 한참 진행 중이었고,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때임 이 때문에 연내 선고는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음 그러나 이 같은 예측과 달리, 김기춘 실장이 ‘연내 선고’를 지시한 2주 뒤 박한철 현재 소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들과 오찬 자리에서 연내에 선고하겠다고 말함. 실제로 2014. 11. 25. 변론이 종결됐고 12. 19. 실제 선고가 이루어졌음. 통합진보당 해산에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해 연내 선고를 지시한 사실이 뚜렷이 업무일지에 적혀 있으며, 이는 삼권분립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폭거 비서실장을 뜻하는 ‘장’이란 표시 아래 이적단체 해산을 위한 심재철 의원 법안 등 각종 공안 사건과 한 묶음으로 기재돼 있음
5	12. 17.	‘月(월), 정당해산 확정,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 지역구 의원 상실 이견 - 소장 의견 조율 금일 중, 조정 끝나면 19일, 22일 초반(?)’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7일 청구인과 피청구인 소송대리인에게 이를 후인 2014년 12월 19일에 선고를 할 것이라고 통지했다. 이를 전인 2014년 12월 17일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과 관련한 재판관들의 평의내용을 미리 알고 이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말한 것이다. 실제로 헌법재판소

			는 이 무렵 정당해산과 비례의원의 자격 상실에 대해서는 이미 결론을 내렸고, 지역구 의원에 대한 자격 상실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선고 당일에 최종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헌법재판관 중 누군가와 내통하였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	--	--	---

### 3. 사이버 검열과 사찰 관련

순번	메모일 (2014년)	내용	배경, 이후 진행 및 평가
6	9. 23.	VIP 7시간 관련 - 주름수술설 (사이버수사팀)	사이버 망명을 불러 온 9월 18일 검찰의 유관기관 대책회의가 대통령 비판 게시물을 '적폐'로 보는 청와대 지휘하에 이루어진 사실이 밝혀짐. 검찰은 9월 25일 '사이버허위사실유포전담수사팀'을 발족함. 검찰이 '공인'에 대한 모독에 '선제적 대응'과 '실시간 모니터링'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날 회의에 포털 뿐 아니라 카카오톡도 참여한 사실이 알려짐. 논란 국민들의 사이버 망명이 시작됨. ※ 검열 대상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관련 '음란성', '주름수술' 관련 설로 보임.
7	11. 12.	다음 카카오 동향	검찰 사이버전담팀은 11월 17일, 첫 사건으로 세월호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퍼뜨린 여성을 재판에 넘기고, '대통령 헐담' 유포한 남성 자택을 압수수색함. 12월 카카오톡 이석우 대표와 이듬해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연달아 검경에 소환되고 수사를 받음.
	11. 14.	다음 카카오 이석우 대표 - 통계수치 발표계(획). - 개인정보보호. 개인비리. 온라인뱅킹 대행 (10만원 이하)	
	11. 20.	VIP 압수수색 - 인터넷 여론 엄벌 ↑	

4. 종교인, 민간인 사찰

순번	메모일 (2014년)	내용	배경, 이후 진행 및 평가
8	8. 7.	<장> 신부-뒷조사 경찰, 국정원 Team 구성 -> 6국 국장급	청와대가 천주교 신부에 대한 뒷조사를 경찰과 국정원 팀에 지시한 것으로 추정 청와대가 '뒷조사'라는 표현을 쓴 것은 충격적. 스스로도 위법적인 사찰이라는 점을 인식한 것은 직권 남용. 범죄 혐의가 있다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일. 개인의 약점을 수집하여 검박하려는 시도로 보임. 청와대는 뒷조사를 한 천주교 신부가 누구인지 밝혀야.  ※ '6국 국장급'에 유의해야. 업무일지 다른 부분에서 6국 국장은 국정원 추모 국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 추국장은 국내정보 수집 담당, 최순실 관련 정보를 안봉근과 우병우에게 비선 보고했다는 의혹의 당사자.
9	10. 9.	<장> 미시USA-노길남 해외 국익 훼손 불순분자 - 인적사항 확인, VISA 거부 등 입국차단 등 응징 필요 - 법무부 출입국 당국-국정원 연계	사찰에 이어 '응징'도 논의한 것으로 추정. 비자 거부 등 구체적으로 미시USA 관련자들 탄압. 실제로 한 보수단체가 '미시USA' 관련 인물 등에 대한 입국 거부 청원서를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에 제출(10월 10일). 청와대와의 커넥션 여부 밝혀져야. 미시USA 사찰에 가담한 것으로 추측되는 국정원, 법무부, 주미 한국대사관 등에 대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 필요. ※ 10월 17일로 기재된 회의에 ▲누가 참석했는지, 회의 내용은 무엇인지 ▲회의 결과에 따라 무엇을 실행했는지 ▲사찰 및 불이익 피해자가 있는지 진상 규명 필요.
	10. 17.	미시 USA 관련 회의 -> 보안관	
10	11. 22.	황선 & 신은미 토크콘서트 장소제공 관련 조치요	'신은미&황선 전국순회 토크문화콘서트'는 11월 19일 조계사 전통문화예술 공연장, 이후 전국 순회. 11월 21일 <문화일보> 보도 직후 청와대가 콘서트 장소를 제공한 조계사 압박 방안 논의한 것으로 추정.
	11. 25.	<장> 조계사 - 황선 장소제공 - 개입조사후 조치(자승)	방북 경험을 나누는 행사 장소를 대관해줬다는 이유만으로 조계사를 압박했다면, 청와대의 직권 남용 ※ 명시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에게 직접 압박을 가한 사실이 있는지 진상 규명 필요

5. 세월호

순번	메모일 (2014년)	내용	배경, 이후 진행 및 평가
11	20140713	長 좌익들 국가기관 진입욕구 強”, 확고한 신념을 가자. 대통령. 북 응원단 구미호 경계. 우파 지식인 결집. 우파시민단체	12일 세월호 가족버스 전국 순회 보고대회 세월호특별법을 좌익들이 국가기관에 진입하고자 하는 시도로 보는 듯한 내용임. 우파지식이나 시민단체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드러남
12	20140829	김영오 사찰 의혹 1.병원 입원 병원장 만나 문의-사찰 2.정읍에서의 개인정보등사찰 1.8/22입원 8/20 동대문구 담당 10동부병원 통상적 대화-병 원장 이보라 과장이 주치의라 다행이다. 현실 참여. 집무태도 훌 륭 죽으면 더 문제. 8/22 호송. 뉴스보고 병원장에 전화 용태문의 맥박, 혈당 낮다. 휴식. 치료 생명지장 無 2.8/22 입원일 정읍 6급공무원 인터넷검색 김영오 고향 정읍이라는 사실. 6급-이평면사무소 전화 김영오에 대하여 문의. 모친o, 학교x, 명절에만. 6급이 정읍 시장에 보고.(담당공무원) 이평면 직원이 김영오 모→아들→言論	8월29일 유민 아빠 김영오씨, 46일 만에 단식 중단 당시 김영오씨에 대한 사찰 의혹이 김영오씨 주치의에 의해 사실로 밝혀 짐. 국정원은 당시 이를 부인.

6. 문화예술계

순번	메모일 (2014년)	내용	배경, 이후 진행 및 평가
13	8. 3.	“김종덕 교수, 방어에 최선을 다하도록”	2014. 08. 김종덕 문체부 장관 임명 (‘비선실세’ 최순실의 최측근 차은택 추천) 차은택, 문화융성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2014. 10. 문체부 내 ‘유진룡 라인’ 1급 공무원 6명 사표 (3명 수리) 2014. 11. 김상률 교육문화수석 임명 (차은택 외삼촌) 2015. 04. 차은택, 문화창조융합본부 단장 임명 2015. 10. 미르재단 설립 2016. 01. K스포츠재단 설립
14	10. 2.	“長) ○문화예술계의 좌파 각종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 - 다이빙벨, 파주, 김현”	홍성담, 다이빙벨 사태 이후 본격적으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검열을 실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정무수석실, 교육문화수석실을 경유하여 문화체육부 산하 공무원으로 하여금 블랙리스트 예술인에 대한 지원 배제와 작품 검열을 수행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남.  <주요 사태> 2014. 08. 광주비엔날레 홍성담 작가 ‘세월오월’ 전시 유보 2014. 09. 문체부 및 부산시, 부산국제영화제에 다이빙벨 상영 취소 압력 2014. 10. 김기춘, 팝아티스트 이하의 전단살포행위에 대한 법정형 상향 지시 2015. 04. 아르코예술극장 긴급 폐관으로 서울연극제 공연 취소 2015. 07. 이윤택 작가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선정 취소 2015. 0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산실 선정자 박근형 연출에 작품포기 종용

			<p>2015. 10. 양상블 시나위 국악공연 취소  '다이빙벨' 배급사 시네마달 내사 지시  세월호가 연상된다는 이유로 '팝업씨어터' 공연 방해</p> <p>2015. 12. 부산시, 이용관 부산영화제 집행위원장 고발</p> <p>2013~2016. 세종도서지원 심사 시 한강 작가 등이 사상검증으로 탈락</p> <p>&lt;이후 진행&gt;</p> <p>2016. 12. 12. 문화예술단체들과 민변이 특검에 김기춘, 조윤선 외 문체부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고발</p> <p>2016. 12. 26. 특검, 문체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10곳 압수 수색  조윤선 하드디스크 교체/증거인멸 정황 포착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 블랙리스트 목격 증언  SBS, 블랙리스트 입수 보도</p> <p>2016. 12. 28. 특검, 최순실이 박대통령에게 필요성을 주장하며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정황 포착  국정원의 인적 정보가 동원된 단서 입수</p> <p>2016. 12. 29. 블랙리스트 전달 의혹 모철민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소환 조사  문화예술단체들, 조윤선 장관의 사퇴 촉구 기자회견</p> <p>2016. 12. 31. 특검,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조윤선 장관을 위증 혐의로 고발해 달라고 요청  황교안이 임명한 송수근 문체부1차관이 블랙리스트를 총괄했다는 문체부 내부 증언이 나옴</p> <p>2017. 01. 02. 문체부 관계자, 국회 국조특위에 조윤선 장관 취임 후 블랙리스트 파기 지시가 내려왔다고 증언</p> <p>2017. 01. 11. 조윤선 장관 사퇴 촉구-블랙리스트버스 예술행동 실시</p> <p>2017. 01. 16. 블랙리스트 소송 원고모집 기자회견 개최</p>
--	--	--	--

7. 전교조

순번	메모일 (2014년)	내용	배경, 이후 진행 및 평가
15	6.20.(금)	<p>○ 전교조-고용부에 조치토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LO, OECD에 외무부 통하여 취지 전달토록</li> <li>- 교원노조법 개정안 환노위 계류중 원칙 고수토록 독려</li> <li>- 전교조 투쟁 일정 : 6/27(금) 상경투쟁, 7/12(토) 전국교사대회</li> </ul> <p>장(長)</p> <p>○ 전교조 지지 교육감 다수 갈등 예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부 제도적 법적 장치로 일선을 통제할 수 있는가 system 구축</li> <li>- 저항 : 半합법, 비합법 혼합, 강력한 의지로 법집행, 전교조 생존 문제로 경시할 수 없어</li> <li>- 국제적 연계 정부 압박</li> <li>긴 process 끝에 얻은 성과</li> <li>엠네스티, ILO, 대사들로 숙지토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19 1심 판결 직후 전교조의 대응 일정을 청와대가 꼼꼼히 파악</li> <li>☞ 1심 판결 후 다시 고조될 국제사회의 비판을 모면하고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li> <li>☞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대한 국제 사회의 비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li> <li>- 2013. 10. 24. 고용노동부, 전교조에 '노조 아님' 통보 후 2014. 3. 13. ILO, 전교조 법적 지위 보장 권고 보고서 채택</li> <li>- ILO, OECD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국제기준 위배. 대한민국 정부에 교원 노동기본권 보장 권고</li> <li>- 김영삼 정부 당시 교원·공무원 노조 합법화는 OECD 가입 조건이자 정부의 약속이었음</li> <li>☞ "교원노조법 개정안 환노위 계류중. 원칙 고수토록 독려" : 행정부의 최고 권력이 입법부에 영향력 행사</li> <li>☞ "전교조 생존 문제로 경시할 수 없어" : 전교조를 이번에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의미</li> <li>☞ "긴 process 끝에 얻은 성과" :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집권 세력의 '장기적인 기획과 노력'에 따른 결과임을 드러냄</li> <li>☞ 2014. 6. 5. 진보교육감 13인 당선에 따라 청와대가 지방교육자치를 통제하는 체계적 방안을 모색</li> </ul>
16	6.24.(화)	<p>장(長)</p> <p>○ 장관 - 전교조 비노조 통보 - 비노조 가처분실요 - 불법집단 행동</p> <p>○ 2대 과제</p> <p>① 민노총, 민노당 ② 전교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교조 탄압이 2대 과제 중 하나. 청와대가 전교조 등 노동조합 탄압을 '주요 국정 과제'로 주문하는 불법성</li> <li>☞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동일한 기초</li> <li>-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 등을 이용해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됨. 원세훈은 2011년 재임 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을 '중북 좌파 세력'으로 규정, 국정원이 분발해 전교조 불법화하라고 지시(국정원 댓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짐).</li> </ul>

17	9.20.(토) ~21.(일)	<p>9.20.(토) 장(長) ○ 전교조 관련 대처. ① 즉시 항고 인용 ② 현재결정-합헌</p> <p>9.21.(일) 장(長) ○ 전교조 - 공대협</p>	<p>☞ 2014. 9. 16. 교육부, 전교조의 세월호 참사관련 교사실천을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공문 시행</p> <p>☞ 역사교과서 관련 전교조 실천활동에 대해 청와대가 총력 대응 주문 - 2014. 9. 11. 전교조, 「국가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중등교사 의견조사」 보도자료 : 교사 90%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 2014. 9. 12. 전교조와 교과모임, 「2015 교육과정 개정 시안 공청회 대응 전면 개정 반대 기자회견」 (13:30, 한국교원대) - 2014. 9. 25. 전교조 「유신회귀 한국사 국정화 반대 · 사회적교육과정위원회 설치 촉구 교사선언 기자회견」 (현장교사 8,081명 서명)</p> <p>☞ 2014. 9. 19.(금) 서울고등법원, 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처분 ‘효력정지 결정’ (가처분 인용),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두번째 법내노조 지위 회복)</p> <p>☞ 청와대 비서실장은 위 결정 다음 날, 즉시 항고하여 인용할 것과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유도 구상 : 헌법재판소 교원노조법 2조 합헌 결정일은 다음 해인 2015년 5월 28일 전교조 창립 26주년 기념일</p> <p>☞ 또다시 공대협(公對協, 공안대책협의회)을 통한 대응 주문</p>
18	9.24.(수)	<p>장(長) ○ 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 - 신념 ○ 전교조 관련 탄원서. 다다익선</p> <p>○ 현재에 전교조 제기 헌소 등 2건 동시 계류 - 고용노동부 지원</p> <p>장(長) ○ 국사교과서 국정화 - 국민 통합. DJ 김인정 국회에 가서 호소노력. 설득토록</p>	<p>☞ “전교조 관련 탄원서. 다다익선” :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에 대해 보수단체 동원하여 탄원서 제출 조직 → 2014.9.30. 대법원 제출</p> <p>☞ “국사교과서 국정화 - 국회에 가서 호소 노력. 설득토록” : 입법부에도 영향력 행사 - 2014. 8. 7. 국회 교육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황우여 “국사는 국가가 가르쳐야 국론분열 씨앗 안 뿌려” - 2015. 1. 8.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역사는 한 가지로 아주 권위 있게 가르쳐야 한다” - 2015. 10. 28 시정연설 뒤 거리서 촛불 든 문재인, “황우여, 국정화는 윗선 뜻이라 했다” (중앙일보)</p> <p>☞ 청와대 개입 이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본격 추진</p> <p>☞ “현재에 전교조 제기 헌소 등 2건 동시 계류 - 고용노동부 지원” : 전교조 제기 헌법소원에 대한 현재 결정에 영향력 행사 시사</p>

8. 언론계

순번	메모일 (2014년)	내용	배경, 이후 진행 및 평가
19	6/17	KBS노조. 16개 직능단체 - 사장선임절차 ?? -공영방송 영,독,일. -수? 곤란 *사추위(김인규사장)-여야 ?분 방통위원장과 ?? 방통심의위원장 경태파(???) -부위원장 인?-?? 김성묵으로 합의.	공영방송 KBS인사와 방송에 개입한 정황은 2014년 6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무려 17건 등장. 특히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6월15일자 메모에 “홍보/미래 KBS 상황, 파악, plan 작성”이라는 글귀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KBS 사장 선임 관련 플랜을 작성하라고 청와대 홍보수석 및 미래전략수석에게 지시한 정황으로 추정.
	7/3	KBS 6명 - 조대현 7	- KBS 방송 장악을 위해 이사들의 성향을 파악. 특히 박근혜 정권에 반대한다는 이유나 야당쪽 이사를 ‘좌파’로 인식. 언론의 공정성을 좌우 대립의 시각으로 보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언론관이 얼마나 왜곡돼 있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증거.
	7/4	장. KBS 이사 좌파 이사 -성향 확인 요	
20	7/15	령(領) 2. 특정언론에 보안누설. 인사.정책 누설 내부정보 유출되지 않도록 -> 교육, 보안 장치 -> 기강해이 단적인 증거, 현혹 신뢰 -> 상시감찰체계구축	-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만만회’를 비선실세라 공개하여 파문이 일던 중임. 언론보도로 논란이 확대되자 회의석상에서 구체적으로 지시함. 김기춘 비서실장은 시사저널, 일요신문을 특정하여 조치할 것을 지시했고, 만만회 의혹이 SNS를 통해 확산되자 6건의 트윗을 특정하여 사이버수사대 내사 지시.
	7/17	만만회 고발 트위트글 6건 사이버수사대 내사 지휘	